



# 양돈농가 부채 실태와 합리적 해결방안

## 특집

### 양돈농가 부채 실태와 해결방안

#### 1. 농가부채의 본질

**전** 통적인 우리사회에서는 부채를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 부채는 오히려 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에서 과거에는 모든 것이 자금자족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자금 투자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자금은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으로의 자금 유입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농가가 부채를 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적 자본제한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이 기본적으로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관계로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외부 금융기관이 농업 부문으로 자금을 꾸어주는 것을 꺼려하는 외적 자본현상까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업·농촌에는 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농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부채라는 것이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어느 정도 남음이 있을 때에만 그 부채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빚을 얻어 빚을 갚아야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김 정 주 교수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2. 농가부채 현황과 개선방향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가들은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나머지 부채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더니 마침내 전국 농업인 단체들이 농가부채 경감을 촉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까지 갖기에 이르렀다.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정리에는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정부가 역대정권의 농정 실패가 농촌을 피폐화시켰고 그 결과 농가는 빚더미에



양돈업은 종래의 부업적 경영을 벗어나 전업 경영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올라왔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농가부채를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가 진 부채는 당연히 그 상황을 유예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요구이다. 이러한 주장의 저변에는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라는 요구도 함께 들어 있다고 본다.

농가 부채가 어느 정도 이기에 이처럼 야단 들인가? 현재 전농가의 농가부채 총규모는 정책자금 10조 3천억원,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 상호금융자금 12조 7천억원, 기타자금 5조 8천억원 등 28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농가당으로 환산하면 농가당 평균 1천

9백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1996년 12월말 현재 1천 1백만원 수준 보다 1.7배가

농가 부채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처럼 야단 들인가? 현재 전농가의 농가부채 총규모는 정책자금 10조 3천억원, 농협과 축협 등 협동조합 상호금융자금 12조 7천억원, 기타자금 5조 8천억원 등 28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농가당으로 환산하면 농가당 평균 1천 9백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1996년 12월말 현재 1천 1백만원 수준 보다 1.7배가 큰 것이다.

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부채 28조 8천억원 가운데 내년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이 13조 8천억원

규모에 이르러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농업경영체의 연쇄 부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도가 우리경제에 주는 충격에 못지 않은 또다른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진다. 더욱이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그동안 정부가 정부 예산과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투자한 전업농 육성, 생산유통시설 확충, 농촌특산단지 조성 등을 위한 자금이 고스란히 낭비되어 농업경쟁력 제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라하여 농가가 진 모든 부채를

대상으로 무조건 상환을 면제해 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부채를 지지 않고 건실하게 자력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농업인 상호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의 유용 여부와 부실 원인 등을 가려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올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해야 할 정책자금을 일정기간 상환연기하고 농업경영체의 도산을 막기 위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침 정부는 농가부채 대책 위원회를 가동하여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수립하였는바 그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감 대상자금을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인력육성, 생산·유통지원사업, 환경농업, 축산시설, 농기계, 유통가공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에 지원된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농가,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농가,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농가, 호화생활을 누리는 사이비 농가, 경영이 부실

하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등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했거나 아예 부채를 지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산환유예기간중 정책자금 등의 시설설치 자금이나 농축산 경영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상환을 유예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기간동안 중장기 정책자금 대상자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차별화를 시킨다는 것이다.

상호금융자금은 농축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협동조합 책임 아래 상환연기와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하면 될 것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협회나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양돈분야의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잘못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가리고 부당한 대출은 즉시 회수하며, 부실 경영체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가부채 경감대책은 엄청난 재정지출을 수반하므로 이것이 지나치면 농업인과 비농업인간의 역(逆)형평성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재정지출 수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부채 경감대책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처럼 두 마리의 토

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한다.

### 3. 항구적인 농가부채대책

그런데 실제로 1987년과 1989년에도 농가부채 경감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농가부채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는커녕 오히려 농가로 하여금 의타심만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 비농업부문으로부터 나오는 평가이다.

따라서 이번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단순히 농가부채를 경감해줌으로서 농민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농가소득으로부터 창출된 농가 경제잉여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건전한 경영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된다. 이 소득원의 비중은 대략 7 : 3정도가 된

다. 따라서 농업소득의 증대와 함께 농외소득 증대에도 힘써야 한다. 농업소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나 이는 농가 기술수준이 이미 상당히 향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결국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농산물 유통문제와 자원절약형 경영을 도입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 두가지 문제는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 4. 양돈산업의 과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돈업은 종래의 부업적 경영을 벗어나 전업경영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하는 장치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막대한 외부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고스란히 양

돈농가의 부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양돈업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돈육소비는 계속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축산물 중에서 그나마 대일 수출이 활발해진 분야가 양돈이고 보면 정부도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부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빛을 또 내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따라서 축협이나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양돈분야의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잘못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가리고 부당한 대출은 즉시 회수하며, 부실 경영체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값싼 동업자 의리를 지키려다 빚마져 얻어 쓰지 못할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養豚**



## 양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sa-pork.or.kr>”